

## 정책동향

## 지식기반 산업, 180만개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생명기술·나노기술 등 하이테크 산업으로 이뤄진 지식기반 산업이 2010년까지 약18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가 밝힌 '2010년 업종별 구조 및 인력 전망'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하이테크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67.1%로 2000년의 60%에 비해 7.1% 증가하고, 금융·보험과 통신서비스가 주가 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2010년 비중은 51.3%로 2000년의 41.7%에 비해 9.6% 늘어난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도 점차 확대돼 2010년 지식기반 제조업의 총 취업자 수는 206만명으로 2002년에 비해 41만명의 순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2010년까지 총 취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2002년 대비 13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영 본격적인 기술협력시대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주한영국 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3회 한영산업기술 협력 포럼'이 영국 과학혁신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산자부 신국환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 대표 약 50명과 영국 측에서 과학혁신부 로드 세인스버리 장관 등 정보통신·생명과학·에너지·나노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했다. 세인스버리 장관은 이날 "양국 정부가 10만파운드씩을 출연해 기술협력펀드를 조성, 기술교류 및 협력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으로 한국과 영국 양국간 실질적인 산업기술 토론회가 마련돼 향후 양국간 기술을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르면 연내 한영 양측 정부가 각각 10만파운드씩을 출연하는 기술협력펀드가 조성돼 양국 기술전문가와 학자 간 교류자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 기술동향

##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 종합 사이트 구축

정부 부처별 산업 및 기술정보를 한곳에 담은 기술정보제공 사이트가 중소기업에 의해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기업 수요 구조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 종합사이트를 구축,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현재 운영 중인 '테크노넷'에 부처·기관별로 산재된 기술정보를 모아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키로 했다. 특히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독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취약한 정보망 이용실태를 고려,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구축키로 했다. 이 사이트가 구축되면 중소기업인들이 국내 각종 기술 동향과 기술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이메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사이트 구축이 끝나면 현행 직접 운용체계에서 민간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정보전문기관과 연계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대학과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장비 등 기술 관련 자원에 대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생물정보 검색서비스' 개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조영화)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는 그동안 외국에 의존했던 각종 생물정보 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개된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생물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은 과학기술부 지정 국가유전체정보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가 생물정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용량 분석서비스를 외국에 의지하고 있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전용 SMP 클러스터시스템 및 리눅스 클러스터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을 위한 전용 뷰어인 'Dummy Analyzer'를 자체 개발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정보검색 엔진인 KRISTAL-2000을 토대로 Bio-KRISTAL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검색 시스템을 구성했다.

산업동향

기술거래소 유망 핵심기술 DB구축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 이 DB에는 광전송장치·개인휴대통신중계기·알루미늄합금·인공피부·바이오센서·토양오염복원시스템 등 정보통신·금속소재·바이오·환경 등 4개 분야의 116개 기술이 수록됐다.

이번 DB는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의 기술거래 활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화를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초기 기술이전 비용의 일부를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술거래기관의 중개로 사업성이 높은 외부의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비용 중 선불금의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지원여부와 금액은 기술이전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 기술 수요자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중 선불금의 70%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 50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의 2차 연도 사업인 업종별 전사적자원관리(ERP) 템플릿 개발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업간 정보화를 위해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형 ERP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ERP 업체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개발분야는 전자·기계·자동차·조선·철강을 비롯한 30개 B2B 네트워크 구축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분야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 분야 당 최고 3억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고, 12월 초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개발사업자가 선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템플릿 개발이 추진되며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ERP시스템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외뉴스

[미국] 10년 홀대 기초과학 기반 흔들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대한 미국 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줄어들자, 미국이 전세계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지해 온 선도적인 위치를 지키려면 기초과학 투자를 즉각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보기술 관련 분야 발전에 긴요한 학계의 핵심 연구에 대한 미연방정부 지원금 지출은 지난 90년대 공학 30%, 수학·물리학 각 20%, 화학 10% 등 모든 분야에서 급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 지출의 이 같은 감소는 교수와 학생수 감소, 고급인력 감소, 미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양질의 연구능력을 감퇴시키는 기초학문 연구인프라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 반도체산업은 연평균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지난 20년 동안 대학 연구에 5억달러 가량을 투자해 왔다. 다른 산업들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의 연방정부 R&D 투자 감소를 매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위기의 R&D 감소추세를 경계했다. 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들은 연방정부에 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에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이나 연구실의 기초연구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금지원을 약속하며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전국대표대회 이후 경제정책

지난 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새지도부 구성이지만 이 회의를 전후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발언이나 발표들도 쏟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5년 전 15차 회의에서는 장쩌민 주석이 국영기업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개방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